

제2차 북미정상회담

# 남북 잇는 '철마' 달릴 수 있을까?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북미 정상은 이날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두번째 회담을 갖는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회담 때 극적인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환호했다면 이번 2차 회담에선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여론조사(리얼미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서 국민 3명중 1명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남북 경제협력 분야'로 철도·도로(33.0%)를 꼽았을 정도로, 지역과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 상관없이 1위를 기록

국민 33% 중점 추진 경험에 철도·도로 꼽아

대북제재 선제 해결해야 본격 추진 가능

북미회담 성과 나오면 남북회담서 진전안 기대

한 점도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잃게 한다.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성과(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중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8일 동안 북한 철도를 따라 2600km를 이동하며 현지 공동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그해 12월26일 북측 개성 판문점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같은해 6월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망 연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남북 현지조사는 11월30일~12월5일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 400km, 12월8일~12월17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 800km에 대해 진행했다. 경의선 이 구간은 2017년 12월에도 현지 조사한 바 있으며 동해선 이 구간은 분단 이후 우리 철도가 처음으로 운행되는 것이다.

이 조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유류와 각종 물품의 북한 반입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일 수 있었는데 15개 이사국이 제재 면제를 승인 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조사는 북한 철도 시설과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밀조사에 필요한 철단장비 반입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았다. 현재 상태에선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노무현재단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했을 때 "교량이나 터널 부분 철도 건설은 철단장비를 이용한 정밀조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대북제재가 상당부분 해제돼야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정밀조사 등을 위해 철단장비를 반입하거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또는 민간투자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제재 일부를 해제·완화해야만 한다.

업계 안팎에선 낙관하는 분위기는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4

시간 걸리는 항공편 대신 60시간이나 걸리는 열차로 이동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북미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면 다음달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추진적인 조사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남북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망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며 "남북의 민족적 화합을 넘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美 민주당 "종전선언 안전보장 유일한 길"

하원의원 20명 결의안 발의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0명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 종전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원선거에 당선된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카나, 바버라 리, 프라밀라 자야랄, 밥 하랜드, 잭 셔카우스키 의원 등 20명이 이날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유해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남북 이산가족 및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재회와 인도주의적 협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종전 선언이 남북한과 미국 국민들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돼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동일소득에 과세권 조정 '이중과세방지 협약' 개정 합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27일 이중과세방지 협약 개정과 원전·국방·방산, 에너지·건설, 산업·투자, 교육·훈련, 수도도시 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UAE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 위와 같은 분야에서 두 나라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UAE 정상은 회담 뒤 두 나라 장관이 서명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임석했다.

양국 장관들은 ▲특별전략대화 MOU ▲관광교류협력 MOU ▲스마트 팜협력 MOU ▲정정생산과생태산업개발협력 MOU ▲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응용에 관한 MOU ▲산업투자협력 MOU ▲수도도시기술협력 MOU ▲후자이라 정유시설 MOU 등 8개 분야에 서명했다. 또 정부 간 협정인 개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도 맺었다.

정부 간 협정인 이중과세방지 협약

### 한-UAE 정상회담

연 1회 '특별전략대화' 개최

외교·안보·지역경제 논의

관광교류 등 MOU 8건 체결

은 2003년 맺은 한·UAE 이중과세협약을 전면 개정해 동일 소득에 대한 한·UAE간 과세권을 조정, 양국 국민의 이중 조세 부담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의 목적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UAE 측에서는 외교부 장관 대신 안와르 가르가쉬 외교담당 특임장관이 서명했다.

특별 전략대화에 관한 양해각서는 최소 연 1회씩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특별전략대화'를 여는 것이 골자다. 외교장관 또는 외교장관이 지칭하는 대표자가 수석대표를 맡는다. 주요 의제는 외교안보, 지역 경제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이다. 강경화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특임장관이 서명했다.

다. 관광교류 협력 MOU는 관광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관광교류를 증진하 내용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특임장관이 서명했다.

스마트 팜 분야 협력은 스마트 온실, 가축케어, 대추야자 및 버 재배 등 스마트 팜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스마트 팜 분야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동사업과 민간 협력도 진행해 두 나라 간 상호 투자 확대 지원에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이유디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이 서명했다.

산업·투자 협력 MOU는 칼리파 산단단지 등 UAE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투자 환경 및 투자정책 공유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국무장관이 서명했다.

후자이라 정유시설 계약에 대한 협

약서도 체결했다. 2017년 12월부터 SK건설이 공사 중인 후자이라 지하자원 저장시설 프로젝트에 관한 협약이다. 해당 저장시설은 세계최대 규모로 약 20억 달러 상당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국무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사장이 서명했다.

이밖에 청정생산과 생태산업 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청정생산과 생태산업개발 협력 MOU, 폐기물 재활용 및 응용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폐기물 재활용 정책사례 및 응용에 관한 MOU도 각각 체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각각 서명자로 나섰다. UAE 측에서는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이유디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이 서명했다.

또 수도도시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에 대한 협력을 담고 있는 수도도시 기술협력 MOU도 체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국무장관이 서명했다.

/뉴시스

## 민주 전북도당 "북미정상회담 성공 기원"

"한반도 종전 선언기대 큰 의미로 와닿아... 평화 매진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8시30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호텔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단독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환영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기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아픔을 안고 있던 한반도에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기대 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와 민족적 소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북·미 정상들이 몇 번의 회담을 가진다 해서 금방이라도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종전이 선언될 수 있다는 기대 자

체가 우리에게 그 어느 상황보다 큰 의미로 와 닿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한뜻을 모으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해 도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범도민적 평화통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견과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앞으로 대북 관련 정책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앞으로의 노력을 강조했다.

도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위한 전초 단계로 승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이 이뤄지는 날까지 도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 평화당, 9·19 평양선언 지지 촉구 결의문 채택

민주평화당과 개성공단 비대위원회는 27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19 남북 정상간의 평양 선언 내용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경제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

한 UN 제재 결의사항의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해 제재 면제를 할 것"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주평화당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즉각 허용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개성공단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 "군산대 시외버스 요금 인상, 반발 거세"

조동용 도의원, 전북도화 전복고속 상대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재정 약화와 승객 감소는 이해하지만 하루아침에 기존요금의 2배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며, 학생들의 통학편의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즉각 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자로 전국 시외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복고속 외 2개 업체가 전주, 익산, 김제, 부안-군산대 시외버스 요금을 최대 64.7% 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군산대 시외버스 노선은 지난 2002년부터 하루 12회를 3개의 버스업체가 운행 중이다.

이번 요금인상에 대해 전주-군산대 직행노선을 운행 중인 전복고속 측은 2002년 노선개설 당시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책정요금의 40%를 인하한 요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현재는 당시에 비해 승차인원이 반으로 줄어든 데다 학교 측에서 1일 2회 운행하는 전세버스로 인해 군산대 노선의 적자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존 40% 인하를 철회하고 정상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다. /김진성 기자

## 與 "평화·공존 새 역사 시작... 한국당, 냉전 도그마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할 것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내일이 한반도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며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 성과를 내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1박2일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노이선언은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말을 뿌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싸운 틈을 틈은 한반도 평화의 꽃을 우리 손으로 활짝 피워야겠다"며 "한국당과 보수진영도 냉전 시대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소라고 하고 종전선언을 평화 착시현상이라 폄하하는 주장은 결코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며 "한국당과 보수진영이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석 최고위원도 "내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만 평화, 종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

다"며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도 즉각적인 조건 없는 동참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 내리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큰 평화의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남북경협조치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다시 열려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타점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